

# 광주 장애인 10명 중 4명 '중증'...17개 광역 시·도 최다

### 2021년 등록된 장애인 6만9819명 중 2만7794명 달해 건강검진 수검률 시민 평균 밑돌아...사망 원인 1위 '암'

광주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중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광주시 보건 의료지원단이 최근 발간한 '광주시 장애인 건강현황 모니터링 지수 개발 및 지표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만9819명(2021년 기준)으로 광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였다. 광주시 보건 의료지원단은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전국 장애인구에서 차지하는 광주의 비율은

2.6%였으며 장애유형은 지체(42.2%), 청각(14.6%), 지적(10.5%), 시각(10.3%), 뇌병변(9.7) 순이었다. 광주 장애인구의 39.8%(2만7794명)가 중증장애로 전국 평균 37.2%보다 높았다. 광주에 이어 제주(39%), 대전(〃), 충북(38.5%), 부산(38.1%) 순으로 많았고 전남은 36.1%였다. 광주의 2022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파악됐고, 암 검진 통합수검률은 46.5%

였다. 이는 광주시민 검진 수검률에 비해 각각 14%, 13.7% 낮은 수치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지역 내 건강 불평등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장애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었다. 사망원인은 ▲암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기타 세균성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순이었다. 광주는 중증장애인이 많아 관련 예산도 많았다. 각 지자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520만3000원으로 전국평균(288만6000원)보다 80% 많았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건강행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장애인 흡연율은 16.4%로 전국 평균(18%)보다

낮았고, 음주를 또한 전국평균인 18.3%보다 낮은 17%를 기록했다. 권장신체활동수행률은 33.9%로 경남, 울산 등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다만 장애인 대사증후군 발견율이 20.5%로 전국 평균(19.9%)보다 0.6%p 높았다. 지원단은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공공의료협력팀 등 공동연구로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파악해 건강지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지수를 개발했다. 장애인 건강지표는 6개 영역 총 63개 지표로 구분했다. 6개 영역은 ▲의료필요 ▲의료이용 ▲의료자원 ▲건강행태 ▲건강결과 ▲복지영역 등이다.

63개 지표는 연도별 추이, 지역별 비교, 세부분석, 인구집단 비교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준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광주 중증 장애인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약 39%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광주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으로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공공의료협력팀이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초가을 하늘 아래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가을을 맞아 지난 31일 광주시 용봉동 북구청 광장 화단에 메리골드, 일일초 등 가을꽃을 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협의회 출범

광주·전남 지역 29개 대학을 아우른 대학인권센터협의회가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협의회)가 지난 3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 전남대 인권센터(센터장 홍관표 교수) 주도로 출범한 협의회는 광주권 14개 대학과 전남권 15개 대학 인권센터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홍관표 전남대 인권센터장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대학 인권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교육·법률 자문 인력 구성 등 업무도 맡는다. 홍관표 의장은 "지역 29개 대학 인권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학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는 전국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9·4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광주교육청 '곤혹'

### '교육부 징계 공문' 교사 알림방에 올렸다가 시정요구에 정식 공문 전교조 "교육감, 멈춤의 날 지지 생색내더니 징계 겁박 '이중 행보'"

광주시교육청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지난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육부의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광주지역 초·중·고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라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교원들이 서울 서초구 교사의 49재일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

치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사실상 정식 공문 성격이 아니었다. 공식 접수 절차를 밟지 않고 교사 알림방에 올려 놓도록 한 단순 계시용이었다. 교사들이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시교육청이 사실상 교육부의 공문 하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교원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담긴 교육책이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0일 성명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언론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동참을 장려하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정작 교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징계와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공

문을 학교에 보낸 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광주지역 학교에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광주 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공문을 보내는 시늉만 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로 지난 31일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해 담당자를 정해 읽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공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이 광주 교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계시용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시정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정식 공문을 내려보내 절차를 밟고 시행하게 됐다"면서 "전교조나 교육부 양측에서 압박을 받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경찰, 9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광주·전남 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기간 연장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

를 거쳐 허가 받을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